



5면

산단지역 노동자 아침식사 지원

전주매일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윤 6월 28일) 제380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피지컬 AI 실증 거점 도약 발판 마련

정부 국책사업 예타 면제
향후 5년간 총 1조원 투입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 AI(Physical AI)' 실증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피지컬 AI 실증·연구 기반 조성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최종 의결하면서, 전북은 향후 5년간 총 1조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피지컬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존 인공지능을 넘어, 자동차·로봇·드론·스마트 공장 등 물리적 시스템을 스스로 인식하고 제어하는 차세대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제조업, 물류, 의료, 농업,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산업 패러다임을 뒤엎을 차세대 기술로 꼽힌다.

세계적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도 "앞으로 10년 안에 피지컬 AI가 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전북은 이번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농기계 제조업, 자율주행, 드론 산업에 피지컬 AI 기술을 접목해 실증과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피지컬 AI 테스트베드와 융합 실증 기반을 전북에 구축하고,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일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피지컬 AI'의 정부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과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결집해 산업별 특화 솔루션을 개발하고 국제 표준을 선점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는 현대자동차, 네이버, SK텔레콤,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며, KAIST, 성균관대, 전북대 등 주요 대학과 연구기관도 힘을 보탠다.

전북이 피지컬 AI의 국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다.

총 사업비는 1조원 규모로 모처럼 대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을 활용해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

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실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환경을 조성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신산업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향후 전북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지컬 AI 실증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이 전북을 시험 무대로 선택하면,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정동영·이성운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힘이 더해져 국무회의의 통과와 예타 면제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북을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이자 글로벌 혁신의 허브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피지컬 AI 사업은 단순한 기술 실증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AI 주권 실현과 더불어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모델로도 평가된다.

수도권과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집중돼 온 AI 산업을 지역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북은 기존의 제조업 기반과 새롭게 떠오르는 모빌리티 산업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피지컬 AI가 안착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역 사회의 기대감도 크다. 도내 기업들은 피지컬 AI 실증 환경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기술 검증이 한층 수월해지고,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은 세계적인 연구 네트워크의 협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열리면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북자치도가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전북은 단순한 기술 실험장을 넘어 대한민국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이자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몽골 우민고비주
교류·협력 방안 모색

우문고비주 주지사 전북 방문
교육·의료 등 협력과제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몽골 우문고비주 주지사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상호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 협력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측은 △유학 및 계절근로자 교류 △교육·문화 교류 확대 △헬싱빙·치유 의료 협력 △문화·관광 산업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4월 전북을 방문한 달란자드가드 시장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자원 봉사센터 해외 의료봉사 △남원시와의 계절근로자 파견 △도내 병원 건강검진·의료 연구 △문화관광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다시 공유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우문고비주와의 만남은 양 지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계기"라며 "전북은 교육·의료·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방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문고비주 주지사도 "전북과의 협력이 교육, 계절근로,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만호 기자

구급대원의 숨은 무게 담아... 전북소방 솜품, 조희수 140만회 돌과

실제 소방대원 출연
땀·노고 도민과 공유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제작한 솜품 영상이 지난 14일 전북소방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회를 기록한 데 이어, 현재 140만 회 이상을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구급대원은 출동할 때 과연 몇 kg을 들고 달릴까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실제 소방대원이 출연해 산소통과 구급가방, 제세동기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지고 달리는 모습을 담았다.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실제 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제작한 솜품 영상.

황을 반영해 제작된 이 영상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단 1초라도 빨리 달려야 하는 구급대원의 치열한 현장을 생생히 보여준다.

공개 직후 댓글창에는 "장비 무게보다 더 무거운 생명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게 감동이다", "달리는 모습이 멋있다", "존경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와 같은 격려가 쏟아졌다. 또 "언젠가 소방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다", "저 무게를 지고 가볍게 달리다니 대단하다"는 반응까지 이어지며, 영상은 단순 조희수를 넘어 구급대원의 땀과 노고를 도민과 공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영상에 직접 출연한 전주덕진소방서 조아현 소방교는 "촬영을 통해 구급대원들이 평소 감당하는 무게와 현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완주 통합, 지역 의견 고려해 추진”

행안부 “6자 간담회 제안 보도는 사실과 달라...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 해명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지원과 관계자가 “6자 간담회를 공식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다.

정부는 통합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19일 전주 MBC와 JTV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관영 전북도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윤희태 완주군수, 안호영·이성운 국회의원에게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한 6자 간담회를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장관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일 뿐, 간담회 추진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

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또 “전주·완주 통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의견 조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특히 “통합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사”라며 “향후 절차는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행정 효율성, 도시 경쟁력 제고, 균형 발전 등을 이유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두 지역 간 이해관계와 주민 여론이 엇갈리면서 통합 논의는 매번 진전을 보지 못했다. 최근 들어 정치권과 지

자체 차원에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다.

행안부의 이번 해명은 논의가 특정 방향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지역 내 우려를 차단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참여를 중시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를 접한 한 도민은 “전주·완주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넘어 생활권, 교육, 산업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력을 가진 사안”이라며 “정부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와 지역사회 여론 수렴 과정에 따라 속도가 조절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